구조물 떨어지고 기울고… 장마 앞둔 광주 곳곳 '안전 위험'

광주 남구 상가서 구조물 파손·추락… 하파터면 인명 피해
사고 인지 못하다 하루 지나서 확인 "구조물 철거 예정"
서구서는 기울어진 40m 높이 기계식 주차장, 현장 점검

15일 오후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상가 옥상에 설치된 곰 모양 구조물이 파손돼있다.

장마철을 앞둔 광주에서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기우는 등 안전 관련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집중호우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는 기조를 세운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남구 진월동 한 3층 규모 대형 상가 옥상에 설치된 간판을 든 곰 모양 조형물에서 발 부분이 파손돼 10여m 아래 인도 위로 떨어졌다.

파손된 조형물이 추락할 당시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조형물 파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이날 상가 측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상가 측은 조형물 파손 경위에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조형물 안에 빗물이 들어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 오는 17일 오전 철거할 계획이다.

해당 조형물은 지난 2024년 상가 준공과 함께 설치됐다. 특히 조형물 주변에 이렇다 할 지지대가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위로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이번 사고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집중호우철에 앞서 도심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을 다시 살피고 서둘러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광주 서구에서는 상가에 딸린 기계식 주차장이 기울면서 대형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서구 화정동에는 지난 2003년 상가 준공과 함께 지어진 약 40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이 기운 채 방치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현재 남동방향으로 일부 기울어있다. 주차장 주변 6곳에서 측정된 변위값은 60mm~205mm 까지로, 6곳 중 3곳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에 해당하는 기울기 점수를 받았다. 주차장은 시설 노후화로 최근 몇년 동안 쓰이지 않는 상태다.

주변 상인들은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바로 옆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한 탓에 주차장이 기울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공사는 '공사 이전부터 지반이 가라앉은 상태였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이 이어지자 서구는 유관 부서 합동 점검단을 꾸려 이날 오전 현장 실사에 나섰다. 점검단은 '비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어보인다'는 소견을 내는 동시에 조만간 주차장 설계도면과 안전 점검 결과지를 대조·분석한 종합 결과를 낼 예정이다.

집중호우철을 앞두고 안전 사고로 번질 만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예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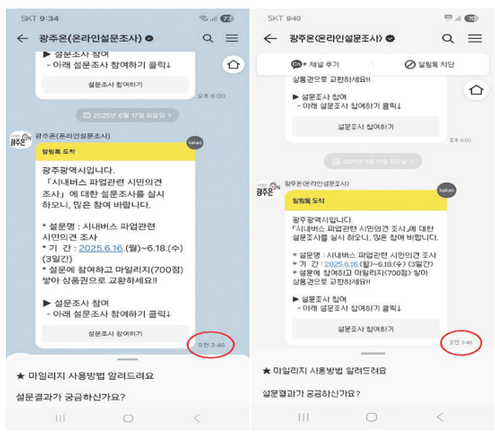
특히 최근 정부가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발생 시 지자체장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면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떠오른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장마철 등 재난이 예상되는 시기가 다가올 때 지자체는 실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절차에 서투름이 없어야 한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파악·분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전 교육을 마치고 역량이 강화된 직원들을 예찰 활동에 투입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실제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상가 상인들이 주변 아파트 신축공사로 지반이 가라앉아 기계식 주차장이 기울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구 화정동 지반 침하 의심 상가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모습.

새벽 난데없는 '광주 버스 파업' 설문조사

17일 새벽 광주시 설문조사 독려 문자 발송돼
새벽 시간 전달 메시지, 일각 "의도 무엇" 의심
시 "특정 의도 아냐… 시스템 한계 탓 순차 전달"



광주시가 운행을 중단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설문하겠다며 새벽 시간 시민 소통 온라인 채널 '광주온'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발송, 항의와 함께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부터 새벽 시간대인 오전 4시 사이 카카오톡 서비스 '광주온'에 가입된 지역민들에게 광주지역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시민 의견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인 설문에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적정 임금 인상률 ▲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에 따른 적정 인상률 ▲버스 요금 인상 시기 등 3개 안건이 담겼다.

특광역시별 운전원 월평균 임금 현황(광주시 459만원)과 특광역시별 교통카드 기준 버스 요금, 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광주시 2024년 1402억원) 등도 첨부됐다. 설문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4760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댓글 창에는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거나 '적자노선 개편이 시급하다' '버스회사 대상 철저한 세무조사, 버스기사 교육 절실'등 의견이 달렸다.

다만 이날 새벽 시간 잠든 사이 갑작스러운 설문 참여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댓글 창을 통해 광주시에 항의·성토를 쏟아내기도 했다.

'재난문자 온 줄 알았다', '새벽 4시 반에 설문 참여 메시지가 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이어 '밤 중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인출됐다는 알림이 울린 사람들도 있다.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건 아니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통상 설문조사 참여 독려 메시지가 그동안 일과 시간대 또는 퇴근 무렵인 오후 5시~6시 사이 발송돼왔다는 점에 비춰봐 이번 새벽 발송은 이례적이다. 의견 수렴 기간이 5일 여에 걸쳤던 과거 설문조사와 달리 이번 설문조사는 불과 사흘에 그치기도 하다.

특히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9일 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시가 부랴부랴 설문 참여를 독려한 점에 일각에서는 의도를 의심하기도 한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 급히 진행되는 설문의 배경이 어느 선에서 시작된 지시인지 궁금하다. 파업을 유도해 사측의 이익과 직결된 표준 원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에 새벽 문자 발송은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설문조사의 취지로 사안의 시급성을 들면서, 새벽 시간대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발송 시스템의 한계 탓이라고 해명했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설문의 시급함을 느끼고 서둘렀다. 내용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이 임금 인상과 직결돼있는 것 같아 첨부하게 된 것"이라며 "급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설문 기간을 사흘로 잡았다.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메시지 발송을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통상 설문 조사 독려 메시지는 당일 오전 9시께 보낸다. 메시지는 일괄 전송이 아니라, 발송 전담 업체를 통해 가입 지역민 3만500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며 "새벽 메시지는 전날 오후 7시58분 발송된 것이다. 대중교통과와 문항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다 발송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과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파업에 따른 광주 시내버스 운행률은 17일 기준 79.2%를 기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전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준비 '착착'

권역별 연수 운영, '위기 학생 맞춤 지원' 협업 체계 구축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6일부터 권역별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6회에 걸쳐 이뤄지는 권역별 연수는 16~17일 국립목포대학교(서부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중부권), 이어 23~2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동부권)에서 각각 진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연수는 2026년 모든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장, 과장, 학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600여 명이 참여하는 연수는 사업별 역할 분담을 넘어서 '학생을 함께 교육한다'는 관점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교직원 간 협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 정책 방향 이해 ▲ 운영 사례 ▲ 학생 지원 패러다임 변화와 학교의 역할을 논의한다. 또한 학생 지원 방식의 전환, 사업 재구조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영업수당 인정해달라" 가전 판매대금 5억 꿀꺽한 영업사원 실형

'셀프 정산' 영업수당·자체 할인분 역시 法 "횡령액에 포함"

가전제품 판매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채 생활비나 벌금 납부 등에 쓴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 중 5억1300여 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전제품 판매 대금 16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보관하다가, 일부를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38차례에 걸쳐 횡령한 판매 대금은 게임 아이템 결제 비용·생활비·벌금 납부 등에 썼다.

A씨는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일부 금액은 사측에 송금했다. 영업수당(매출액 중 3%)과 매출 전환 금액 중 7%(사원별 자체 할인액)를 합산한 6500여 만원은 처분 권한이 있었다. 횡령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수당은 A씨가 일단 판매대금을 사측에 주고 나서 받아야 할 사후 정산 받아야 할 돈이다. 자체 할인액 역시 위탁자금으로서 정확히 얼마를 고객에 할인해주고 받은 대금이 얼마인지 특정조차 안 된다. 사적으로 쓴 금액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송현근 기자